규제입증책임제 개편시행 안내

□ 추진 배경

– 정부는 '19년부터 입증책임전환제 적용해 2년간 3,8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으나, 현장변화와 기업체감도 낮다는 평가

* 국조실에서 개선 대상분야 선정해 일제 점검하는 Top-Down 방식

– 올해부터는 'Top-Down식 전수방식'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· '수요자 중심'* 입증책임제' 추진

* 민간이 제안하는 핵심과제 점검·기존 미해결과제 성과 제고

□ 주요 개편 사항

① 대한상의에서 안건상정 전담

– 입증책임제 적용과제 건의·취합처를 상의로 일원화

– 상의는 경제적 효과, 기업체감도 큰 과제 중심으로 선별·건의

②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운영방식 개선

– 규제입증위원회에 상의 등 경제단체를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

③ 국무조정실장 주재 '미해결 과제 조정회의' 운영

– 미해결과제 해결 위해 정기조정회의(각부처 실장급 배석) 개최

④ 규제챌린지 방식 도입

– 국제적 기준(Global Standard)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우선개선

– 입증책임제 건의과제 중 1) 불수용 과제, 2) 해외사례 존재과제 중심으로 챌린지 과제 최종 선정. 분기별 챌린지 회의개최

* 필요시 해외상의 네트워크·전문기관 활용하여 해외사례 보완

〔참고〕 규제입증책임제

○ **개요**

– 피규제자(국민·기업)가 규제폐지 필요성을 건의하는 대신 소관부처가 존치필요성 입증 못하는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

– 대한상공회의소 건의로 도입('19년 VIP-기업인과의 대화)해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시행 중

○ **그 간의 성과**

– ('19년) 하위법령(고시·지침·행정규칙 등) 규제, 기존 불수용 과제 등을 전수조사 결과 총 2,062건 개선

– ('20년) 일반 법령, 자치법규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하여 총 1,800여건 개선

〔 **주요 개선사례** 〕

-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간소화 (고용노동부)
- 선박 전기추진설비 방진·방수 보호등급 완화 (해양수산부)
- 온실가스 배출 신고 관련 중복규제 완화 (산업통상부)